

구분	규제 여부	신설, 강화	폐지, 완화	총량제 적용
1. 지사무소 설치 절차 간소화	○	-	○	×
1-1. 임원선거 관련 선관위 위탁 근거 마련	×	-	-	×
1-2. 조합의 사업범위에 외국환업무 추가	×	-	-	×
2. 상호금융업권 불공정한 여신거래 금지	○	○	-	×
3. 고객응대직원(일명 '감정노동자') 보호	○	○	-	×
4. 법정적립금 적립기준 상향 및 용도 완화	○	○	-	×
5. 합병 후 존속조합의 등기비용 등 부담 완 화	×	-	-	×
6.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	-	-	×
7. 중앙회의 조합 여유자금 운영성과 배분 합 리화	×	-	-	×
8. 중앙회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에 대한 법률상 근거 규정	×	-	-	×
9. 중앙회에 대한 예탁금 등 대위변제청구권 소멸시효 단축	×	-	-	×
10. 금전제재의 개선 및 제재시효 도입 등	△	△	△	×
11. 벌칙 관련 중앙회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	○	-	×
12. 용어 정비	×	-	-	×

'10. 금전제재의 개선 및 제재시효 도입 등' 구분

비규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금감원 위탁 근거 마련 임원에 대한 제재종류 개선 및 제재권한 위임
규제	신설, 강화	<p>과태료의 상한을 2천만원(현행1 천만원)으로 상향 과태료 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 시정명령 미이행(2천만원) · 고객응대직원 보호의무 위반(1천만원) <p>횡령·배임·사적금전대차의 금지(제재의 근거 마련 취지) 농·수·산림조합 및 중앙회의 신탁법 적용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설립인가의 취소 제외) ·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에 대한 벌칙(징역2년, 벌금2천만원) · 수뢰·횡령·배임·사적금전대차의 금지(제재의 근거 마련 취지) · 조합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 벌칙일부 · 과태료 일부
	폐지, 완화	제재시효의 도입 벌금에서 과태료 전환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비용자동산정시스템을 통해 작성

신용협동조합법

<목 차>

2. 상호금융업권 불공정한 여신거래 금지
3. 고객응대직원(일명 ‘감정노동자’) 보호
4. 법정적립금 적립기준 상향 및 용도 완화
10. 금전제재의 개선 등
11. 벌칙 관련 중앙회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금융위원회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2. 상호금융업권 불공정한 여신거래 금지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성 자	이름	김 준
	담당부서(과)	중소금융과		직급	사무관
	국장	정 완 규		연락처	02-2156-9859
	과장	신 진 창		이메일	zero@korea.kr
3. 관계법령 · 고시 등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의2, 제95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신용협동조합, 농·수·산림조합 - 이해관계자 : 조합원 등 여신거래자				
5. 규제 존속기한	- 지속적 추진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불공정한 여신거래를 금지하여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존속기한이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				
6. 구분	- 신설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조합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차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제한 - 농·수협 및 산림조합에도 적용하며, 불공정한 여신거래의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에 의사에 반하여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조합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차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제한

- 불공정한 여신거래의 유형과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함
- 불공정한 여신거래 금지 규정을 농·수협 및 산림조합에 적용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9조의2(불공정한 여신거래의 금지 등)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여신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적금 등 조합이 취급하는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2. 조합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차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불공정한 여신거래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례)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현 행	개 정 안
조제3항·제4항, 제39조제1항제1호·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78조제1항제3호(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감독만 해당한다)·제5호, 제78조제6항,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및 제96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2, 제39조제1항제1호·제6호, 제39조의2----- ----- ----- ----- 제84조의2, 제85조(설립인가의 취소를 제외한다), 제85조의2, 제89조제3항, 제96조 및 제99조(제30조의2 및 제42조 위반에 한한다.)의 규정을 --.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 '14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한 여신거래(일명 '깍기') 금지 조항을 각 상호금융기관의 내규에 도입하였으나, 법령상 근거는 불비

* '13년부터 분기별 연4회 개최, 연2회는 부위원장 주재, 금융위(원)·기재부·행자부·농림부·해수부·산림청 및 상호금융중앙회 임원 참석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 다수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특히 서민 등 취약 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인 깍기를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저신용 서민층·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관행 정착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금융기관 내규로 규제 >

- ☐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인 깍기가 만연하여 이를 규제의 필요성이 전 금융권에 제기되어 타 업권에서는 기 도입된 점 및 내규로만 규제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충실하지 못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이 내규로만 제한하는 것은 곤란

< 비규제대안 : 현행유지안과 같음 >

- ☐ 다수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특히 서민 등 취약 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인 깍기를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음

< 대안 1 : 법률로 불공정한 여신거래 규제 >

- ☐ 불공정한 여신거래를 법률로 금지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 ☐ 원론적인 금지규정만 법률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적용할 예정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 ☐ 해당사항 없음

< 해외사례 분석 >

☐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분석 >

☐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은행법 등 타 업권을 규율하는 내용을 참고하고, 상호금융권의 특징을 반영할 예정

< 위임근거 검토 >

☐ 해당사항 없음

< 이해관계자 협의 >

☐ 입법예고예정
☐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상호금융기관·중앙회 및 금융감독원과의 공동협의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예정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인 꺾기가 만연하여 적절한 규제가 신규로 필요하며 현재와 같이 내규로만 제한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충실하지 못할 가능성

< 결론 >

☐ 불공정한 여신거래에 대하여 상호금융권은 내규로 제한하고 있으나, 서민 등 취약 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꺾기를 법률로서 규제할 필요가 있음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15	2015	1	0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법률로 불공정한 여신거래 규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법률로 불공정한 여신거래 규제>

☐ 간접비용 : -

(정성)제목	불공정한 여신거래로 인한 부당한 이익
분석	일명 ‘꺾기’ 등으로 인한 예금 유치, 상품 판매의 이익 감소
근거설명	일명 ‘꺾기’를 금지함으로써 예금 유치, 상품 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불공정한 영업행위에 대한 불법적인 반사이익에 불과하며 정량화가 어려움

□ 간접편익 : -

(정성)제목	공정하게 여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라는 평판 이익 증가
분석	불공정한 여신거래를 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약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라는 사회적 인식 취득
근거설명	불공정한 여신거래를 하지 않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얻게 되는 간접적 이익이나, 정량화는 어려움

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 ☐ 상호금융기관 중앙회 및 금융감독원을 통해 규제사항을 준수하게 지도하고, 위반 시 검사 등을 통해 제재할 예정
- ☐ 향후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으로 세부사항 등을 정할 예정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 ☐ 영업행위 중 불공정한 부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집행에 따른 기술적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예상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 ☐ 해당사항 없음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 ☐ 해당사항 없음

< 기술규제영향평가 >

- ☐ 해당사항 없음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 ☐ 상호금융권은 불공정한 여신거래를 내규로 제한하고 있으나, 서민 등 취약 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인 꺾기를 법률로 규제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할 필요가 있음
- ☐ 원론적인 금지규정만 법률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적용할 예정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 ☐ 해당사항 없음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 ☐ 입법예고예정
- ☐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각 상호금융기관·중앙회 및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3. 고객응대직원(일명 ‘감정노동자’) 보호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성 자	이름	김 준
	담당부서(과)	중소금융과			직급	사무관
	국장	정 완 규			연락처	02-2156-9859
	과장	신 진 창			이메일	zero@korea.kr
3. 관계법령 • 고시 등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의3, 제101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신용협동조합 - 이해관계자 : 조합 직원				
5. 규제존속기한		- 지속적 추진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고객응대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폭행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별도의 존속기한이 없이 지속적으로 직원을 보호할 필요				
6. 구분		- 신설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합은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직원의 분리하거나 업무 담당자의 교체하도록 하며, 직원에 대한 치료·상담을 지원하고, 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설치하도록 함 - 위반시 조합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조합에게 아래의 의무 부여
 -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직원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의 교체
 -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설치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촉

□ 직원에게 위 조치의 요구권의 부여하고 요구로 인한 불이익 금지

□ 위반시 조합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9조의3(고객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① 조합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운영할 때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

현 행	개 정 안
	<u>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u> <u>체</u> 2.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 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 다 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 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을 직 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 위원의 선임 또는 위촉 4. 그 밖에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 요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직원은 조합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요 구를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 어서는 아니 된다.
제101조(과태료) ① (생략) <신 설>	제10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조합이 제39조의3을 위반하여 직원 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 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이하생략)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 신탁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고객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인격 무시나 폭언 등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는 금융기관의 주된 영업방식이 고객응대를 통한 영업임에 기인
- ☐ 최근 금융업계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객만족’을 강조함에 따라 불쾌하거나 화난 고객을 접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하는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
- ☐ 금융회사는 직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감정노동을 하는 직원에 대한 조치를 별도로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국가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상호저축은행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에서는 ‘16. 3월 법 개정을 통해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의무 등을 반영하였으나 신탁법에는 미반영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 직원이 특정 고객을 기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직원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과 상시적 고충센터 운영으로 근로자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 ☐ 인격 무시나 폭언 등을 예방 및 재발을 방지하고, 그 피해의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현행 규제 없음 >

- ☐ 조합의 고객응대직원 관련 보호조치의무가 없음

< 비규제대안 : 금융기관 내규로 규제 >

- ☐ 행정지도나 신탁중앙회 표준규정 등을 통해 업계 자율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업계 자율로 운용시 제재 근거의 부재 및 자체 감사의 소홀 등으로 이행이 저조할 우려

< 대안 1 : 법률로 고객응대직원 보호의무 규정 >

- ☐ 감정노동에 노출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합의 의무 등을 강제하여 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감조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함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 ☐ 동 규제는 사업 등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네거티브 방식 적용 여부 검토 대상이 아님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 ☐ 심화되고 있는 고객의 인격 무시나 폭언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적극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

< 해외사례 분석 >

- ☐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분석 >

- ☐ 은행법 등 타 금융업 관련 법률 참고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

< 위임근거 검토 >

- ☐ 해당사항 없음

< 이해관계자 협의 >

- ☐ 입법예고예정
☐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조합·중앙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 조합에게 법률로 적극적 의무를 부과하여 실질적인 직원 보호를 추구하기 위함

< 결론 >

- ☐ 고객응대직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구체화하고, 타 금융업 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직원을 보호하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함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현행유지안 : 법률로 고객응대직원 보호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31.00		31.00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31.00		31.00
기업순비용		31.00		31.00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법률로 고객응대직원 보호의무 규정 >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실험

☐ 직접비용 : 미상

업무제목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지원
설명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직원에 대한 치료·상담을 지원
세분류	실험
활동제목	직원에 대한 치료·상담 비용 지원
비용항목	상담 및 치료비
비용	31,000,000원
활동비용 특성	반복적/비균등
산식	<input type="checkbox"/> 상담 및 치료가 필요 비율 : <u>0.625%</u> (10.3%*50%*50%*50%*50%)

	<p>○ 우울증상*경험비율10.3%(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 * 1년동안 연속적으로 2주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낌</p> <p>○ 가정1 : 우울증상의 원인 중 조합업무 요인 50% : 개인적·가정적 요인 등 제외</p> <p>○ 가정2 : 조합업무 요인 중 고객대면 요인 50% : 고객대면 없는 업무, 실적부담, 업무량, 직장내 인간관계 등 요인 제외</p> <p>○ 가정3 : 고객대면으로 인한 우울감이 업무담당자 교체 등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확률 50%</p> <p>○ 가정4 : 우울증상의 정도가 병원 치료 등이 필요할 수준 50% : 일시적인 우울증상 제외</p> <p><input type="checkbox"/>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할 직원 : 약31명 (약5천명*0.625%)</p> <p>○ 조합 : 9백여 개 / 총 직원 : 약 5천명 / 평균 직원 수 : 약 5명</p> <p><input type="checkbox"/> 1명당 상담 등 비용 : 약1백만원= (10만원*10회)</p> <p>○ 심리상담센터(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1회 10만원 수준(보험불가)</p> <p>○ 정신의학과 상담(전문의) : 1회 1만원 수준(보험가능)</p> <p>○ 심리상담센터 연 10회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p> <p><input type="checkbox"/> 총 상담 등 비용 : 총 31백만원 (31명*1백만원)</p> <p>○ 조합별 평균비용 3.4만원</p>
근거설명	<input type="checkbox"/> 산식에 기재

☐ 간접비용 : -

(정성)제목	업무담당자 교체비용
분석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담당자 교체를 위한 교육비용, 교체된 담당자의 미숙련으로 인한 상대적 손실
근거설명	조합에서는 순환근무제를 통해 2~4년 마다 담당자 교체하도록 하고 있어 비용 소요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구체적

	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어려움
(정성)제목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설치비용
분석	조합 내부에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를 설치 하도록 하였으나 추가의 설치 비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
근거설명	전임 담당자 없이 업무로 인한 일반적인 애로 사항과 같이 기존의 인사·노무 담당자 등이 겸직하여 실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점, 정기적 회의 개최 등이 없어도 근로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에 대한 처리를 하면 되는 점 등을 고려

☐ 간접편익 : -

(정성)제목	고객응대 직원의 복지 증진
분석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강화에 따른 폭언, 폭행 감소 기대
근거설명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강화에 따른 폭언, 폭행 감소로 근무자 복리의 증진이 기대되나, 정량화는 어려움

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 ☐ 중앙회 및 금융감독원을 통해 조합이 규제사항을 준수하게 지도하고, 위반시 검사 등을 통해 제재할 예정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 ☐ 타 금융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집행에 따른 기술적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예상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 해당사항 없음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기술규제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 ☐ 감정노동에 노출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합의 의무 등을 강제하여 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동 개정내용의 신설이 필요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 ☐ 법적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조합에 대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를 적극적으로 강제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 ☐ 입법예고예정
☐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각 상호금융기관·중앙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4. 법정적립금 적립기준 상향 및 용도 완화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성 자	이름	김 준
	담당부서(과)	중소금융과		직급	사무관
	국장	정 완 규		연락처	02-2156-9859
	과장	신 진 창		이메일	zero@korea.kr
3. 관계법령 · 고시 등	신용협동조합법 제49조, 제52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신용협동조합				
5. 규제존속기한	- 지속적 추진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정적립금의 적립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기한 없이 적립				
6. 구분	- 강화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 법정적립금을 출자금 총액의 2배가 될 때까지 매년 이익금의 20%(현행 10%) 이상을 적립 - (일부완화) 손실 보전용도로 법정적립금 사용 (현행은 조합이 분할·해산하는 경우에만 사용)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법정적립금이 납입출자금 총액의 2배가 될 때까지 매 사업년도 이익금의 20%(현행 10%) 이상을 적립
- (일부완화)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에 법정적립금 사용할 수 있게 하되, 손실의 보전을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정립금의 순서로 하게 함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사업년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입출자금 총액의 2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49조(법정적립금) ① ----- 사업연도의 손실 보전을 하고 납을 때에는 -- 20 ----- ----- ---
② 조합은 분할 또는 해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할 수 없다.	② ----- 분할 또는 해산 및 손실금 보전----- -----.
제52조(손실금의 처리) ① 조합의 사업연도 중에 생긴 손실금은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의 순으로 보전하되, 잔여손실금(殘餘損失金)이 있으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제52조(손실금의 처리) ① ----- ----- -----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신탁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취약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내부유보율 제고 필요

- 현행 신탁법에서는 법정적립금을 매 사업연도 이익금의 10% 이상을 납입출자금 총액의 2배*가 될 때까지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자기자본의 3배

- 신탁의 법정적립금 적립률이 타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적립기준을 상향할 필요

* 신탁의 법정적립금은 자기자본의 8.6% (농협 16.9%, 수협 21.0%, 산림 40.9%)

☐ 또한, 법정적립금을 손실금을 보전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법정적립금이 충분한데도 재무재표에 손실금이 기표되어 불합리 존재

*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손실금보전 목적으로 사용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법정적립금의 적립은 법상 의무이며, 법정적립금 적립률을 상향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을 필요

- 자율적인 임의적립을 유도하는데 한계 존재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 내부유보율 상승 및 재무구조 개선으로 신탁의 건전성 제고
 - 추가 적립예상 조합(213개)이 이익금의 20%까지 1회 적립하였을 경우 추가 적립액은 58.8억원, 순자본비율의 평균은 적립 전 4.56%에서 4.61%로 개선

이익금대비 적립*현황	미적립	이익금의 10%이상 20%미만 적립	이익금의 20%이상 적립
조합수	213개 조합**	213개 조합***	483개 조합

* 2016.2.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및 특별적립금 합계

** 동 사업연도 적자 또는 누적결손 조합

*** 법정적립금 적립기준 상향으로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조합

☐ 법정적립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어 손실금의 처리 용이 및 손실금의 처리에 따른 조합의 대외 신뢰도 상승 가능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이익금의 10% 이상 >

☐ 법정적립금은 법정 사항으로 현행을 유지할 경우 법정적립금의 추가적 적립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

- 자율적인 임의적립을 유도하는데 한계 존재

< 비규제대안 : 내규 등으로 추가적립 의무 >

☐ 법정적립의무는 이익금의 처분 중 배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조합이 자율적인 임의적립을 유도하는데 한계 존재

< 대안 1 : 이익금의 20% 이상 >

- ☐ 법정적립금 적립률을 상향하기 위해서는 법개정 필요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 ☐ 동 규제는 사업 등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의 추가 적립이라는 적극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검토 대상이 아님

< 민간의 자율성 · 창의성 >

- ☐ 해당사항 없음

< 해외사례 분석 >

- ☐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분석 >

- ☐ 타 상호금융권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도 '10%이상'이나 타 상호금융권의 경우 자기자본대비 법정적립금의 비율이 높고, 이월금, 정관상 임의적립금 등을 감안할 필요

< 위임근거 검토 >

- ☐ 해당사항 없음

< 이해관계자 협의 >

- ☐ 입법예고예정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 법정적립금은 법정 사항으로, 현행을 유지할 경우 적립금의 추가적 적립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

< 결론 >

- ☐ 법정적립금은 법정 사항으로 추가 적립에 대한 법개정 이외의 대안은 생각하기 어려움
- 타 상호금융권도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이 10%이기는 하나 타 상호금융권의 경우 자기자본대비 법정적립금의 비율이 높고, 이월금, 정관상 임의적립금 등이 존재함을 감안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 해당사항 없음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15	2015	1	0	백만원, 현재가치

현행유지안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 해당사항 없음

<규제대안 1 : 이익금의 20% 이상 적립 >

☐ 간접비용 : -

(정성)제목	경영에 대한 자율권 제약 등
분석	이익금의 처분(배당 등)에 대한 자율을 제한하고, 출자금 추가 조성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근거설명	법정적립금 적립비율 상승으로 인한 배당률의 감소 등으로 출자금 추가 조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 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어려움

☐ 간접편익 : -

(정성)제목	조합의 재무적 건전성 제고
분석	재무적 건전성 제고로 인한 신뢰도 상승
근거설명	법정적립금 추가 적립으로 건전성이 제고되고 신뢰도가 상승할 것으로 것으로 판단되나, 정량화는 어려움

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 매년 잉여금의 처분 결과를 중앙회가 일괄로 취합하여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 가능

○ 위반시 검사 등을 통해 제재 가능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 중앙회 전산 시스템을 통해 취합 가능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 해당사항 없음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기술규제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 법정적립금은 법정 사항으로 추가적립에 대한 법개정 이외의 대안은 생각하기 어려움

- 타 상호금융권도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이 10%이기는 하나 타 상호금융권의 경우 자기자본대비 법정적립금의 비율이 높고, 이월금, 정관상 임의적립금 등의 적립 등이 존재함을 감안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 해당사항 없음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 입법예고예정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10. 금전제재의 개선 및 제재시효 도입 등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성 자	이름	김 준
	담당부서(과)	중소금융과		직급	사무관
	국장	정 완 규		연락처	02-2156-9859
	과장	신 진 창		이메일	zero@korea.kr
3. 관계법령 • 고시 등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의2, 제95조, 제101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신협, 농·수·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				
5. 규제존속기한	- 지속적 추진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행정처분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재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며, 농·수·산림조합 및 중앙회의 신탁법 적용을 확대하여 상호금융권 전체에 동일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존속기한 미설정				
6. 구분	- 강화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 과태료의 상한을 2천만원(현행1 천만원)으로 상향 - 과태료 대상 확대 · 금융위원회 시정명령 미이행(2천만원) · 고객응대직원 보호의무 위반(1천만원) - 횡령·배임·사적금전대차의 금지(제재의 근거 마련 취지) - 농·수·산림조합 및 중앙회의 신탁법 적용범위 확대 · 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설립인가의 취소 제외) · 수뢰·횡령·배임·사적금전대차의 금지(제재의 근거 마련 취지) · 조합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 벌칙 일부(동일인대출한도 초과 등) · 과태료 일부(상환준비금 보유 위반, 감사 방해, 경영공시 위반 등)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과태료의 상한을 2천만원(현행1 천만원)으로 상향

□ 과태료 대상 확대

- 금융위원회 시정명령 미이행(2천만원)
- 고객응대직원 보호의무 위반(1천만원)

□ 횡령·배임·사적금전대차의 금지(제재의 근거 마련 취지)

□ 농·수·산립조합 및 중앙회의 신탁법 적용범위 확대

- 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설립인가의 취소 제외)
- 수뢰·횡령·배임·사적금전대차의 금지(제재근거 마련 취지)
- 조합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 벌칙 일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미만의 벌금 - 제99조)
 - 조합 임직원의 수뢰, 횡령, 배임 및 사적금전대차 (제30조의2)
 - 동일인대출한도 위반 (제42조)
- 과태료 일부 (제101조)
 - 조합의 고객응대직원 보호의무 위반 (제39조의3)
 - 조합의 상환준비금 보유의무 위반 (제43조제1항)
 - 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이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제83조제2항)
 - 조합의 경영공시의무 위반 (제83조의2)
 - 조합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제83조의4)
 - 금융위원회 시정명령 미이행 (제85조제1항제2호)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贈與)나 그 밖의 수뢰(受賂)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다.	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 ----- ----- ----- ----- 약속, 횡령, 배임, 고객과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보증·인수·차입--.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제4항, 제39조제1항제1호·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78조제1항제3호(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감독만 해당하는)·제5호, 제78조제6항,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및 제96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30조의2, 제39조제1항제1호·제6호, 제39조의2, 제39조의3, ----- -----제83조의4,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설립인가의 취소를 제외한다), 제85조의2, 제89조제3항, 제96조, 제99조(제30조의2 및 제42조 위반에 한한다.) 및 제101조(제39조의3, 제43조제1항, 제83조제2항, 제83조의2, 제83조의4 및 제85조제1항제2호 위반에 한한다.)의 규정을 --.
제101조(과태료) ① 조합 또는 중앙	제101조(과태료) ① -----

현 행	개 정 안
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1천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하 생략)	----- ----- <u>2천만원</u> ----- ----.(이하 생략)
1. (생 략) <신 설>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4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u>
2.·3. (생 략) <신 설>	2.·3. (현행과 같음) <u>3의2. 제83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u>
4. (생 략) <신 설>	4. (현행과 같음) <u>4의2. 제8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5.·6. (생 략) <신 설>	5.·6. (현행과 같음) <u>7.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u>
<신 설>	<u>② 조합이 제39조의3을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u> <신 설>	<u>③ 제1항 및 제2항</u> ----- ----- ----- <u>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부과·징수하도록</u>

현 행	개 정 안
	<u>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신탁법령에는 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시효가 없어 **오래된 위반행위도 제재위험에 노출**되어 업무의 안전성 위협 및 **보수적 행태가 심화**

○ 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할 필요

* 공정거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5년이 경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에 제재시효를 도입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 중

□ 과태료의 부과금액이 낮아 **징벌 효과가 미흡**하고,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행정처분에 실효성이 미비**

*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상 과태료 최고액은 5천만원(신탁 1천만원)이며, 금융위원회는 금융관계법령의 과태료를 상향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 중

○ 신규로 도입되는 **고객응대직원 보호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 필요

□ 법에 따라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벌금 등 상이하게 부과되어 불합리한 규제 차이 발생

□ 신탁법에서 규정하는 임원 제재의 종류가 **검사및제재규정과 상이**하여 법률 정합성에 문제 발생

신탁법	개선	직무정지	견책	경고	주의
-----	----	------	----	----	----

검사및제재규정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	------	------	------	-------	----

신탁법 제84조 제1항 개정 연혁

- 금융감독위원회의 상호금융조합 임원에 대한 개선, 직무정지, 견책 조치권한 신설(1998.1.13. 전문개정)
- '임원에 대한 주의·경고' 조치권한 추가(2000.1.28 개정)

○ 임원의 제재 중 **견책은 상대적으로 경징계***에 해당하고, 상호금융기관이 비교적 소규모인 점 등을 감안하면 금융위 의결사항으로 적합하지 않고, 전체 제재 **비율 및 빈도****가 높아 금융위 업무에 부담

* 견책은 임원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정직 이상의 제재는 자격제한사유) 실질적 불이익이 없음(직원의 경우에는 내규로 승진·승급에 불이익)

** 최근 5년간 상호금융업권의 임원의 '견책' 의결 수 : 53건

□ **횡령·배임·사적금전대차** 등의 위반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재(행정처분)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

○ 임직원의 증여·수취는 신탁법(§30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반면 **횡령·배임·사적금전대차** 등의 위반사항은 신탁법에서 미규정

* 동 지적사항 관련자에 대한 제재시 근거 법규로 **특경가법 및 제재규정 (§5)**을 적시하고 있음

□ 신탁법의 제재 관련 규정 등이 **농·수·산림조합에 한정적으로 적용**되어 적절한 제재가 불가하고 신탁과 비교시 **형평성 결여**

○ 퇴임한 임원, 퇴직한 직원,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

분, 형사상 벌칙 및 행정상 과태료,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등

- 농·수·산림조합이 중앙회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 불비(?)

- ☐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9.2)」 및 「금융분야 제재 개혁 추진방안(‘15.9.2)이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방향(‘16.4.0)」 발표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 과태료 금액 및 대상, 제재의 법적 근거 정비 및 농·수·산림 조합 및 중앙회의 제재 관련 신탁법 적용과 관련된 사항은 엄격한 법정 사항으로 법개정이 필요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 제재관련 행정처분의 시효를 도입하여 **업무의 안정성 도모**와 장기의 기간 도과로 인한 **부정확한 제재** 등 방지
 - 상호금융기관의 보수적 업무행태의 개선, 감독당국의 비효율 해소
- ☐ 과태료 금액을 현실화하고 대상행위를 추가하여 **징벌의 효과** 및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
 -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의 준수 유도 및 고객옹대직원 보호 의무의 준수 유도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위·금감원 간 협력 강화** 및 **업무효율성 제고**

- ☐ 단순 질서위반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과도한 처벌**을 지양하고 **적정 수준의 제재** 부과

- ☐ 제재의 종류 타 법령, 규정 등과 유사하게 변경하여 법령의 **정합성** 제고

- 상대적으로 과중하지 않은 ‘문책경고(舊 견책)’에 대한 권한을 금감원에게 위탁하도록 하여 제재에 대한 **효율성** 제고

- ☐ 횡령·배임·사적금전대차 등의 금지를 명확히 하여 **행정상 제재의 법적 근거 명확화**

- ☐ 농·수·산림조합 및 중앙회에 신탁법 적용을 확대하여 상호 금융권 전체에 동일하게 제재할 수 있어 **업권 전체에 대하여 균질한 제재**가 가능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해당사항 없음 >

- ☐ 상기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유지 곤란

< 비규제대안 : 해당사항 없음 >

- ☐ 제재 등은 엄격한 법정 사항으로 비규제 불가

< 대안 1 : 제재관련 제도 개선 >

☐ 과태료의 상한을 2천만원(현행1 천만원)으로 상향

☐ 과태료 대상 확대

○ 금융위원회 시정명령 미이행(2천만원)

○ 고객응대직원 보호의무 위반(1천만원)

☐ 횡령·배임·사적금전대차의 금지(제재의 근거 마련 취지)

☐ 농·수산업조합 및 중앙회의 신탁법 적용범위 확대

○ 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설립인가의 취소 제외)

○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에 대한 벌칙(징역2년, 벌금2천만원)

○ 수뢰·횡령·배임·사적금전대차의 금지(제재 근거 마련 취지)

○ 조합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 벌칙 및 과태료 일부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 새로운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하거나, 이미 주어진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항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 해당사항 없음

< 해외사례 분석 >

☐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분석 >

☐ 금융위원회가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각 금융관련 법령을 동시에 개정 추진중

< 위임근거 검토 >

☐ 해당사항 없음

< 이해관계자 협의 >

☐ 입법예고예정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기존 제재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개정 필요

< 결론 >

☐ 과태료의 부과금액이 높이고, 대상을 확대하여 징벌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제재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농·수산업조합도 신탁과 동일한 제재가 필요하므로 법 개정 필요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 해당사항 없음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15	2015	1	0	백만원, 현재가치

현행유지안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제재관련 제도 개선>

☐ 간접비용 : -

(정성)제목	추가 납입 과태료
분석	과태료 상향 및 대상행위 확대로 인한 추가 과태료
근거설명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고, 과태료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정량화가 어려움

☐ 간접편익 : -

(정성)제목	평판 이익 증가
분석	의무 위반 행위 등이 감소하여 상호금융에 대한 신뢰도 상승
근거설명	정량화는 어려움

(정성)제목	상호금융기관 제재 균질화
분석	상호금융기관에 전체에 대하여 유사하게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확대되어 영업행위 등에 안전성 및 통일성 유지 가능
근거설명	정량화는 어려움

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 과태료 부과·수납 등 기존 제재 체계를 그대로 이용하여 집행에 문제 없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 해당사항 없음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 해당사항 없음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기술규제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 제재 관련 규정은 엄격한 법정 사항으로 법개정 이외의 대안은 생각하기 어려움

- 새로운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하거나, 이미 주어진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 실효성의 추가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 ☐ 징벌의 효과 및 행정의 실효성, 횡령·배임·사적금전대차의 제재 근거 정비
- ☐ 각종 제재에 대하여 상호금융권 전체에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어 업권 전체에 대하여 균질한 제재가 가능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 입법예고예정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11. 벌칙 관련 중앙회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성 자	이름	김 준
	담당부서(과)	중소금융과		직급	사무관
	국장	정 완 규		연락처	02-2156-9859
	과장	신 진 창		이메일	zero@korea.kr
3. 관계법령 · 고시 등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의2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임직원 - 이해관계자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업무 위탁)				
5. 규제존속기한	- 지속적 추진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민간부분의 부패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				
6. 구분	- 신설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회의 임직원은 수뢰죄 등(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함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회의 임직원은 수뢰죄 등(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함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9조의2(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6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상호금융기관의 중앙회장에 게 검사 등을 위탁하고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어 처벌의 한계 존재
- 중앙회 임직원 뇌물수수시 공무원에 비해 형법상 형량이 낮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은 적용되지 않음
- * 공무원 : 형법 제129조(수뢰,사전수뢰) ~ 제132조(알선수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 非공무원 :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13.11.4)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방안」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정부 등이 위탁한 민간부분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법 개정 필요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수뢰 등 범죄에 대하여 적절한 처벌이 가능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부분의 부패예방 효과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현행 규제 없음 >

- ☐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음

< 비규제대안 : 내규 등으로 신분상 제재 >

- ☐ 수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도 신분상 제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패예방 등을 위해서는 형사상 처벌의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

< 대안 1 : 법률로 공무원 의제하여 수뢰죄 등 적용 >

- ☐ 중앙회 임직원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형법상 수뢰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 ☐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며,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할 여지가 없음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 ☐ 해당사항 없음

< 해외사례 분석 >

- ☐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분석 >

- ☐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12개부처 42개 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의제 추진중

< 위임근거 검토 >

- ☐ 해당사항 없음

< 이해관계자 협의 >

- ☐ 입법예고예정
☐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신협중앙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부분의 부패가 갈수록 심화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동일한 형사상 처벌이 필요함

< 결론 >

- ☐ 금융위원회 등이 위탁한 업무에 대한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앙회 임직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상 수뢰죄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5	2015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법률로 공무원 의제하여 수뢰죄 등 적용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법률로 공무원 의제하여 수뢰죄 등 적용>

□ 간접비용 : -

(정성)제목	추가 비용 없음
분석	형법상 배임수뢰(제357조) 대신 수뢰죄 등(제129조~제132조)의 적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없음
근거설명	정량화는 어려움

□ 간접편익 : -

(정성)제목	청렴한 업무처리로 인한 효율성 및 신뢰도 상승 등
분석	금융위원회 등이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공무원 수준의 형사상 제재를 가함으로써 중앙회 임직원의 부패를 예방하고 공정한 중앙회의 업무처리 기대
근거설명	정량화는 어려움

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 금융위원회 등이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 임직원 등이 수뢰를 한 경우 등에는 현재 공무원과 같이 수사·기소·공판 절차 등을 거쳐 처벌 가능

○ 검사, 내부 감사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신탁중앙회가 인지한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 하도록 조치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 해당사항 없음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 해당사항 없음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기술규제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 ☐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부분의 부패가 갈수록 심화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동일한 형사 처벌이 필요함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 ☐ 수뢰 등 범죄에 대하여 적절한 처벌이 가능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부분의 부패예방 효과
- 중앙회 임직원 뇌물수수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수뢰죄 등, 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 ☐ 입법예고예정
- ☐ 신탁중앙회 및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규제비용분석서

※ 규제비용자동산정시스템을 통해 작성

신용협동조합법

<목 차>

1. 지사무소 설치 절차 간소화
10. 금전제재의 개선 및 제재시효 도입 등

금융위원회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1. 지사무소 설치 절차 간소화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성 자	이름	김 준
	담당부서 (과)	중소금융과		직급	사무관
	국장	정 완 규		연락처	02-2156-9859
	과장	신 진 창		이메일	zero@korea.kr
3. 관계법령 · 고시 등	- 신용협동조합법 제9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신용협동조합 - 이해관계자 : 신탁중앙회				
5. 구분 (폐지 또는 완화)	- 완화				
6. 폐지(완화) 규제의 요지	- 현행 신탁법은 조합이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사무소를 두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조합 총회에서 결정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게 함				
7.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 규제 폐지 (또는 완화) 내용

- 현행 신탁법은 조합이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사무소를 두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조합 총회에서 결정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게 함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공동유대와 사무소) ①·② (생략)	제9조(공동유대와 사무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조합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③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1. 규제의 필요성

가. 기존규제의 문제점

- ☐ 현행 신탁법은 조합이 지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불필요한 행정지연을 야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운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타 상호금융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두게 함

나. 규제 폐지·완화의 목표 및 기대효과

- ☐ 사전 승인 의무를 폐지하여 조합의 자율성을 제고
- ☐ 총회의 결의를 거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조합 내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 가능
- 지사무소 설치에 조직·인원·수익구조 등 조합의 경영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사항임을 감안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무소 설치 >

- ☐ 불필요한 행정지연을 방지하고, 조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유지 불가

< 대안 1 : 조합 정관으로 지사무소 설치 >

- ☐ 총회의 결의를 거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조합 내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 필요
- 지사무소 설치에 조직·인원·수익구조 등 조합의 경영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사항임을 감안

< 대안 2 : 중앙회장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사무소 설치 >

- ☐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전승인 의무를 폐지하는 취지는 동일하나 조합 자율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타 상호금융관련 법률과 동일하게 조합이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나. 대안의 분석

< 이해관계자 협의 >

- ☐ 입법예고예정

< 규제 폐지·완화 관련 위험 요소 여부 >

- ☐ 조합 지사무소 설치 기준에 대하여 신탁의 내규 등으로 일부 조정하여 혼란 예방이 가능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5	2015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 현행유지안 :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무소 설치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200	-	1200
	간접	-	-	
피규제 일반국민		-	-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1200	-	1200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	
정부		-	-	
총 합계		2400	-	
기업순비용		2400	연간균등순비용	

■ 대안 1 : 조합 정관으로 지사무소 설치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총 (현행 포함)	증감 (대안0-현행)	총	증감	총	증감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800	-400				800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800	-400				800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1600	-800				
기업순비용		1600	-800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현행유지안 :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무소 설치>

□ 비용 : 인건비

(정량)제목	인건비 등
금액	2400만원
산식	20건*1인*3일* 20만원*2
근거설명	1. 건수 : 년당 20건('14년 17건, '15년 21건) 2. 건당 소요인력 : 1인*3일 3. 일 평균 급여 : 약20만원 4. 중앙회 및 조합 2명

<대안 1 : 조합 정관으로 지사무소 설치>

□ 비용 : 인건비

(정량)제목	인건비 등
금액	1600만원
산식	20건*1인*2일* 20만원*2
근거설명	1. 건수 : 년당 20건('14년 17건, '15년 21건) 2. 건당 소요인력 : 1인*2일 3. 일 평균 급여 : 약20만원 4. 중앙회 및 조합 2명

* 건당 소요 일수 차이 나는 이유 : 현행은 지사무소 설치 승인 이후 정관(정관에 지사무소 기재)변경 승인 심사 필요, 대안은 지사무소 승인 없이 정관 변경에 대한 심사만 필요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10. 제재시효 신설 등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성 자	이름	김 준
	담당부서 (과)	중소금융과		직급	사무관
	국장	정 완 규		연락처	02-2156-9859
	과장	신 진 창		이메일	zero@korea.kr
3. 관계법령 · 고시 등	신용협동조합법 제85조의2, 제99조, 제101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제재시효 도입 - 피규제집단 : 상호금융기관 및 중앙회의 임직원 - 이해관계자 : 금융감독원, 각 중앙회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 - 피규제집단 :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 - 이해관계자 : 금융감독원				
5. 구분 (폐지 또는 완화)	- 완화				
6. 폐지(완화) 규제의 요지	- 상호금융기관 및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시효(5년)를 도입 - 과태료 부과로 제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단순 질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형사벌인 벌금에서 행정벌인 과태료로 전환(상환준비금 적립 위반, 공시의무 위반, 검사 방해 등)				
7.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 규제 폐지 (또는 완화) 내용

- 상호금융기관 및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시효(5년)를 도입
- 과태료 부과로 제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단순 질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형사벌인 벌금에서 행정벌인 과태료로 전환(상환준비금 적립 위반, 공시의무 위반, 검사 방해 등)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5조의2(행정처분의 시효) ①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제84조의2의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행정처분’이라 한다.)은 해당 사유가 되는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위반행위의 공소시효가 5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공소시효 기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 행정처분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정지된다. 다만, 소송을 제외하고 그 기간이 5년을 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 1. 내부감사 또는 행정처분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된 날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검사·조사 착수일부터 결과가 통보된 날

현 행	개 정 안
	<p>3.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일부터 공소제기여부가 결정 된 날</p> <p>4. 재심·이의신청·행정심판·소 송 등 절차의 개시일부터 처리결과 를 통지받은 날 또는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p> <p>③ 다수인 관련 위반행위의 경우 최 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모든 위 반 관련자에 대하여 제1항의 기간 을 기산하고, 1인에 대한 시효정지 는 다른 위반 관련자에 대하여도 효 력을 미친다.</p> <p>④ 제2항의 행정처분의 시효정지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제재시효 만 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 인 때에는 정지 사유가 종료된 날부 터 3개월이 지난 때에 시효가 완성 된다.</p> <p>⑤ 재심·이의신청·행정심판·소 송 등의 결과에 따라 절차상의 흠이 나 징계양정의 과다 등을 이유로 조 치가 무효화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는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날 또는 결 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지에 따라 다시 조치를</p>

현 행	개 정 안
<p>제99조(벌칙) ① (생 략)</p> <p>②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2. (생 략)</p> <p>3. 제30조의2, 제43조제1항, 제49 조제1항 또는 제59조제3항을 위반 한 경우</p> <p>4. ~ 7. (생 략)</p> <p>8.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 해·기피한 경우</p> <p>③ 제3조제2항, 제27조의2(제72조제 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 또는 제93조를 위반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p> <p>④ 제83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01조(과태료) ① 조합 또는 중앙 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p>	<p>할 수 있다.</p> <p>제9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제49조제1항 또는 제59 조제3항----- -----</p> <p>4. ~ 7.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③ -----제71조의2제 8항----- ----- ----- -----.</p> <p><삭 제></p> <p>제101조(과태료) ① ----- -----</p>

현 행	개 정 안
당하는 경우에는 <u>1천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u>2천만원</u> ----- -----.
1. (생 략) <신 설>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4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u>
2. · 3. (생 략) <신 설>	2.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83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u>
4. (생 략) <신 설>	4. (현행과 같음) <u>4의2. 제8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5. · 6. (생 략) <신 설>	5. · 6. (현행과 같음) <u>7.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u>

1. 규제의 필요성

가. 기존규제의 문제점

☐ 신탁법령에는 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시효가 없어 **오래된 위반행위도 제재위험에 노출**되어 업무의 안전성 위협 및 **보수적 행태가 심화**

○ 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할 필요

* 공정거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5년이 경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에 제재시효를 도입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 중

☐ 단순 질서위반인 경우에도 형사벌인 벌금을 부과하여 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과한 제재

나. 규제 폐지·완화의 목표 및 기대효과

☐ 제재 관련 행정처분의 시효를 도입하여 **업무의 안정성 도모**와 장기적 기간 도과로 인한 **부정확한 제재** 등 방지

○ 상호금융기관의 **보수적 업무행태의 개선**, 감독당국의 **비효율** 해소

☐ 단순 질서위반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타 금융업권과 비교하여 균질한 제재 가능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 ☐ 제재 등은 엄격한 법정 사항으로 법 개정 없이는 상기 문제점 해결 불가

< 대안 1 : 행정처분의 시효 도입 및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 >

- ☐ 상호금융기관 및 중앙회의 임직원에게 대한 행정처분의 시효(5년)를 도입
- ☐ 과태료 부과로 제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단순 질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형사벌인 벌금에서 행정벌인 과태료로 전환(상환준비금 적립 위반, 공사의무 위반, 검사 방해 등)

나. 대안의 분석

< 이해관계자 협의 >

- ☐ 입법예고예정

< 규제 폐지·완화 관련 위험 요소 여부 >

- ☐ 제재시효에 대한 예외를 충분히 마련
- 범죄에 해당하는 위규행위는 공소시효를 제재시효로 규정
 - 소송 등의 경우 시효의 정지 등 규정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5	2015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 현행유지안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 대안 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총 (현행 포함)	증감 (대안0-현행)	총	증감	총	증감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 ☐ 의무의 부과 등이 없이 단순히 제재여부, 제재의 종류에 대한 변경으로 정량적 비용·편익 분석 불가